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담당자 : 김남근 변호사 (010-2253-5834)

일시 : 2024.2.26.(월)

민주당 영입인재, New 민주당 정책제안 발표 시작 ... 첫 번째 주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 현대자동차 출신 공영운 전 사장,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력 방안 제시
- 중소기업들의 기술 전환, 스마트공장화를 위한 대기업-정부 공동 지원 제안
-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성장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포함할 것을 제안

대기업 사장 출신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의 첫 번째 순서로 공영운 전 사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민생(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출신의 공영운 전 사장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시민운동을 해왔던 김남근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구상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New 민주당 정책제안”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입된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입인재들은 취지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당장 민주당의 정책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갈등의 양극화 상황을 개혁할 대안”이 될 수 있는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 제

안을 통해서 “영입 전문가들이 22대 국회에서 펼칠 주요 의정활동의 과제들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의미도 크다”고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입인재들은 이번 시리즈 이외에도 우리 사회 개혁과제들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여도 관련 개혁과제별 의정과제 포럼을 통해 실제 현실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의 첫 번째 발표에 대해 공영운 사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대립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두 바퀴 경제개혁 전략을 주창했지만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다.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독점, 불공정 개혁 입법을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 「온라인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처리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과기·방통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혁신과 독점규제 정책 사이에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생(공정)경제 개혁이 더불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소통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논쟁을 통해 개혁이 지연되지 않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의 창의적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성장 전문가와 민생경제 전문가 사이에 공감대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제안을 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한 **공급망 재편 대응 시 안정적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둘째, 2030년까지 급속히 추진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사업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업체 10.5만 종 사자와 정비업체 20만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 정비업체의 전기차 정비기술 진흥과 충전사업으로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전기차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제안한다. 또 이같은 모델을 산업전환이 추진되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대기업의 생산현장 혁신화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여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정부 재정지원 3박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경제위기 상황을 상생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 플랫폼거래 입점업체 단체 등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상 6법**의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로는 민

주당을 민생정당, 혁신정당으로 변화시키기기 위해 **민생·경제 담당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1.4%까지 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의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상호이해가 절실하다”며 혁신성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이해와 공정한 이익 공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발표한 공영운 사장, 그리고 민주당의 선배·동료 정치인들과 협력해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를 기획한 김남근 변호사는 “영입인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제안의 의미에 대해서 지적했다. “영입인재들이 민주당을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천을 둘러싼 논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저출생, 민생경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부터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28일 수요일 10시 국회소통관에서 R&D 정책과 RE100에 대한 2차 정책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끝)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를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월 23일 이성운 전 고검장,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27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R&D 정책, IT 혁신기업과 혁신성장, 보건의료와 복지제도 개혁, 경찰·검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감시와 개혁, 민생경제와 일자리·비정규직 보호, 지방행정과 교육 등 우리 사회 중추를 이루는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다.

먼저 영입된 인사들은 그 동안 당원들을 상대로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설명하는 정책 투어를 해 오고 있었고, 이번에 영입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영입 인사들이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에 관한 “New 민주당 정책제안”이라는 정책제안 시리즈를 추진하게 되었다. “New 민주당 정책제안”은 당장은 민주당의 정책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갈등의 양극화 상황을 개혁할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입 전문가들이 22대 국회에서 펼칠 주요 의정활동의 과제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미도 크다. 또한,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연관분야 범주별로 모아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여도 관련 개혁과제별 의정과제 포럼 등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들은 27일, 29일 가맹점주 단체, 카포스(동네 정비업체연합), 유통상인단체, 전통시장단체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민생 현장의 개혁요구를 수렴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복지단체, 비정규직단체 등 윤석열 정부의 민생 방치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민생단체들의 개혁요구를 수렴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4일(토)에는 서울시청 앞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여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참사 당일 혼합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 경찰청장이 직전 2번이나 비상대책회의를 하고도 당일 아무런 대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등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국회 점검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 등에 대한 의견청취 활동을 하였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 다양한 개혁 전문가들이 민주당에 영입되어 이들의 활동과 민주당의 정책역량과 개혁요구 소통 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영입 인사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입인사들이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2024. 2. 26.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7명)

박지혜, 이재성, 류삼영, 박선원, 강청희, 황정아, 전은수, 김용만, 공영운, 김남근, 이지은, 백승아, 이훈기, 노종면, 신용한, 이재관, 김제선, 유동철, 김상우, 손명수, 김준환, 임광현, 이용우, 김남희, 차지호, 이성윤, 정한중

(끝)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 일정

	일시 및 장소	주제	참석자 (영입인재)
1차	2.26.(월) 10:00 국회소통관	혁신성장 개혁과제 ①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김남근, 공영운, 김남희, 임광현, 이용우, 이훈기, 박지혜
2차	2.28.(수) 10:00 국회소통관	혁신성장 개혁과제 ② : R&D와 RE100	황정아, 박지혜, 공영운, 신용한, 박선원, 차지호
3차	2.29.(목) 09:40 국회소통관	노동·복지 분야 개혁과제	김남희, 백승아, 이용우
4차	2.29.(목) 11:20 국회소통관	권력기관 개혁과제	류삼영, 박선원, 이용우, 임광현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

“New 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1차에서는 혁신성장을 대변하여 영입된 전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시민운동을 해 왔던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민생(공정)경제”에 관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두 바퀴 경제개혁 전략을 주창하였고, 이에 따라 플랫폼산업과 바이오 등 혁신적 신산업 육성, 벤처창업 붐 조성 등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가맹·대리 점주 등 경제적 약자보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행정체계 구축, 재벌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독점, 불공정 개혁 입법을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처리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과기·방통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혁신과 독점규제” 정책 사이에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2대 국회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생(공정)경제 개혁이 더불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소통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1차 “New 민주당 정책제안”에서는 혁신성장 전문가와 민생경제 전문가 사이에 공감대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제안을 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한 공급망 재편 대응 시 안정적 자원확보 방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책을 제안한다. 또 2030년까지 급속히 추진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사업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업체 10.5만 종사자와 정비업체 20만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 정비업체의 전기차 정비기술 진흥과 충전사업으로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전기차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제안한다. 또 이같은 모델을 산업전환이 추진되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생산현장 혁신화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여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정부 재정지원 3박자로 추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을 상생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 플랫폼거래 입점업체 단체 등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상 6법의 추진과 민주당에 민생·경제 담당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1.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기본법 제정’

1)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내 산업 전반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당장 배터리, 반도체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산업이 광물자원 및 소재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 따라 앞날이 달라질 상황이며, 향후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음.

2) 역대 정부가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과 외교를 펼쳐 상당한 성과에 이른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정권교체 후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음.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한 후 타당성 있는 사업을 유지했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유하게 됐을 것임.

3) 자원확보는 위험도가 큰 사업이고 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특정 정권의 임기 내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해야 함. 여야가 합의해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은 유지하도록 국회가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4) 국회에 ‘공급망 재편 및 자원확보 전략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자원확보 현황 점검 및 예산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제도 수립, 자원확보 의원외교 등을 관장토록 함.

5) 최근 공급망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가칭 ‘자원기본법’을 입법, 국회가 국가의 자원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2. 산업혁신 촉진을 위해 부품 중소기업과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1)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제품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전기가 부품·소재를 공급해야 할 중소기업들의 전기차 소부장 사업으로의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2)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경영난에 직면할 내연기관 부품회사를 H사의 지원으로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로 전환시킨 S사등 우수 사례가 있으며, 이를 부품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속도를 더 촉진할 필요가 있음.

3)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 완성차 가맹점 형식의 정비서비스센터 등 자동차 정비 자영업자들은 전기차 수리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기차 전환 시 심각한 영업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자동차 정비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20만 명을 넘고 상태이어서 대규모 실업을 낳을 수 있음.

4) 이에 따라 “미래차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추진 시, 그 법안에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생산품 전환, 정비업체의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가칭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제안 함. 정부는 전기차 전환과정에서의 세제지원, 기술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자동차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기술자문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진행토록 하고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병행토록 할 예정임.

5) 이와같이 국내 산업구조를 혁신형으로 대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에너지·발전산업 등의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태계 전환 모델’을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함.

특히 탄소 다 배출 업종인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우선 추진 업종을 선별해 중점 지원하는 등 단계적 확대 전략을 펼쳐나가야 함.

3.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막기 위한 거래조건 개선 3대 방안 실시

- 플랫폼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보장
- 대기업 협력업체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산업별 유형화
- 2-3차협력사 거래조건 개선방안 실시

1)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지원정책에 집중하여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기업 전반의 경영상황이 오히려 악화하고,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전체 47%)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등으로 거래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납품대금이 조정되지 않아 대부분 영업적자 상태로 돌아섬.

또한,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새로운 경제현상으로 플랫폼 및 프랜차이즈 가맹산업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과도한 수수료와 고가의 필수물품 강요 등 플랫폼 및 가맹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과 종사자들의 거래조건이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단체 사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보장 6법의 추진

2-1)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단체의 필수물품과 그 공급가격에 대한 단체협상(최근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커피의 단체협상 사례)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거대 플랫폼기업과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사이의 수수료 단체협상(예 : 최근 카카오T와 택시기사단체와의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협상),

예) 배달의 민족과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의 상품 노출순위(ranking) 기준 공유와 수수료 협의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

→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이를 가공하여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철강, 나프타(플라스틱), 비철금속, 종이 등의 주요자재를 공급하는 독과점 대기업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음

예) 철강·플라스틱·비철금속 등 주요자재 공급가격에 대한 단체협상(예 : 플라스틱 협동조합과 나프타(플라스틱 원료) 공급 대기업 사이의 공동구매 가격인하 협상),

→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 상생협력법

3) 대기업이 1차 벤더와의 거래관계 개선효과를 2차벤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예) 대기업의 1차 벤더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조정내역에 비례해서 2차 벤더들이 1차 벤더들에게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제대로 받기 단체협상(납품대금연동제 등)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를 자동차·전자·건설·유통 등 산업별 특성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그룹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 하여 발전시키고, 주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운송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도 전기료, 운송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4.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공장스마트화 사업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법 등 추진

1)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신산업,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장비의 소부장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일터혁신, 공장스마트화 등의 혁신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그러나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일터혁신, 공장스마트화 등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확보나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혁신이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2)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정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공장스마트화 등의 혁신성장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현장 혁신에 관한 기술, 노하우를 전수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품질관리의 자동화 통한 불량률 감소 △설비·부품 최적 관리 △작업 동선 개선 △AI 활용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예) S사가 지원하여 낡은 도금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변신시켜 대졸 청년들도 지원하는 혁신 중소기업으로 만든 부산지역 D사 사례

3) 그러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 예산 등은 지속되지 못하고 축소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음.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2022년 3천466억 원이었고, 이에 매칭한 대기업의 상생지원금과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중소기업 공장스마트화 사업이 추진 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천670억 원으로 53.2%나 크게 삭감하였음. 2024년 2천90억 원으로 2023년보다는 다소 증액됐지만 여전히 2022년 예산보다는 39.6%가 삭감된 액수임. 그나마도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100억 증액된 예산임. 차기 국회 개원 시 스마트 공장 지원예산을 전액 원상 복구하고 2025년 이후 대폭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함.

4)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하여 축소되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법(상생협력법 개정등) 추진

5. 민주당 최고위원회 내에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등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를 신설 제안

- 1) 혁신성장, 민생경제, 경제민주화 등 민생파탄과 경제개혁 문제가 당의 핵심 지도부 논의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2) 최고위원회 공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민생파탄과 경제개혁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도 있음.
- 3)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민생경제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함.

(끝)

[부록 3] 참여 영입인재 프로필

영입 순번	사진	이름 (연령)	주요 프로필
1		박지혜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연천 生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 스웨덴 룬드대학교 석사/ 서울대 법대 박사 - 前 (사)플랜1.5 공동대표 - 前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9		공영운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주 生 - 서울대 경영학 - 前 현대자동차 사장 - 前 문화일보 기자
10		김남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生 - 서울대 법대 / 고려대 법대 박사 - 前 민변 부회장 - 前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3		이훈기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生 - 청주대 / 인하대 석사 - 前 OBS 기자 - 前 OBS 노조위원장
22		임광현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 生 - 연대 경제학 / 하버드대 로스쿨 - 前 국세청 차장 - 前 청와대 행정관
23		이용우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완주 生 - 서울대 사범대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前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
24		김남희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生 - 서울대 법대 / 미국 템플대 법학 석사 / 서울대 법학박사 수료 - 前 참여연대 변호사 - 前 민주당 혁신위원